

법사위 안건조정위,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의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국민의힘 "일방적 특검 법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이견이 큰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구성되는 기구로, 6명의 조정위원이 가장 90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안조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광규택·주진우 위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범여권이 4명이거나 민주당 뜻대로 안조위의 의결 사안을 결정할 수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안조위 후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며 "통일교 특검은 원내대표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1곳에서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고,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과건검사 15명·과건 공무원 130명이다.

김 간사는 통일교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의혹

에 관해)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 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광규택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서 안건 조정하자고 해 저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물리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이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건 검사가 기존 안보다 줄어든 것에 반해 수사관은 늘

어나 총 수사규모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리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다 빼 버리고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별 수사관도 2배로 늘렸는데,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보다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한 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다.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니까 우르르 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수사관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한 검사들은 줄인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간판 바꾸는 국민의힘 "당 쇄신 차원"

책임당원 설문서 응답자 68% 찬성
내달 중 당명 변경 마무리 목표

국민의힘이 12일 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끝에 2월 중 당명 변경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장동혁 당 대표의 쇄신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당명 변경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여게인 세력과 절연 없는 당명 변경이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후대전

화 ARS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에 한정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뒀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지역 당 홍보 본부장 중심의 전국민 참여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보수정당은 2012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14년 간 5차례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 정당은 당명 개정을 수단 당내 위기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인사하며 합창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 큰 역할 부탁"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많다"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두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

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했으며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고,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 했다.

종교인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진우스님(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은 "이번 자리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라며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달 처리"

2026년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산업안전 예산 방향과 주요 증액·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정책 의지를 공유하고, 2026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산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1조5758억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

는 전년 대비 27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선 3배 증가했다.

민주당은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반발'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 근거 신설,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내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예산이 현장에 잘 적용돼서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예방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잘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며 "많은 분의 걱정 중 하나가 채찍만 너무 아프게 휘두르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선 '당근'이 맛있게 잘 작동해서 실제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그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